

金 仁 植 議員

“ 대전의 미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공무원의 노력에 달려있습니다.”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김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효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전발전과 교육혁신을 위해 힘쓰시는 노고에 격려와 위로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열린우리당 소속 비례대표 여성의원으로서는 15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정현장을 직접 확인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소홀히 했던 분야에 대해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저 역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웠으며 집행기관의 정책실현 과정에서 막중한 지방의회의 중요성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박성효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과 대안제시를 통하여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지 대전” 과

“세계적인 과학기술 도시 대전” 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먼저, 가칭 「대전복지재단」의 설립입니다.

현대사회는 인구의 노령화와 핵가족 확산 등의 보편적인 사회복지 개념이 확산됨으로써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대상별 요구 및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각 대상에 따른 전달체계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행정시스템과 집행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시스템은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 대전시, 자치구의 일부 기능을 포함하는데, 주로 기획, 지도, 지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집행시스템으로는 공공부문에서 자치구, 동사무소, 보건소, 일부 공공직영복지기관이 있고, 대부분의 민간복지기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지역사회 내 복지시설 및 기관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개인·집단·지역사회의 생활문제를 경감하고 해소시키려는 민간단체의 자조적인 활동 중심의 전문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문제의 확인에서 해결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이유에서 대부분의 복지시설은 민간부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에도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대전시 전체 예산에서 보건·복지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도에는 전체 예산의 14.0%에 해당하는 1,800억원, 2006년도에는 16.8%에 해당하는 2,600억원, 2007년도에는 20.2%에 해당하는 3,19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가 지원·관리·감독하는 사회복지시설도 2005년도에는 175개에서 2006년 251개로 급증하고 있기에 복지행정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이 담당하고 있는 복지시설을 이용 형태별로

살펴보면, 이용시설이 184개로 약 73.31%를 차지하며, 이용시설 중에서 노인과 장애인 시설이 75개소로 전체 이용시설의 40.76%에 이릅니다.

복지시설은 민간의 직접 운영 또는 공설시설의 위탁 운영 등의 방식으로 전체 251개 시설의 94.5%가 사립시설로 사회복지사업에 민간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어 복지서비스의 직접적인 이용시스템은 민간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고, 재정지원이나 지도·감독 등 공공부분은 대전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9개의 시설유형별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하는 공무원의 수는 14명입니다. 14명이 사회복지시설을 지도·감독하는 것은 업무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은 증가하고, 시설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하여 지원금을 교부하고, 다양한 요구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보건복지여성국 자체에서도 관련 행정체계에 중복되는 업무가 있으며, 각 복지시설의 욕구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보니, 타 시·도에서도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으로 민간단체인 재단을 만들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타 지역의 복지재단 예를 살펴보면, 서울복지재단과 부산복지개발원이 이미 설립되었고, 인천시와 경기도, 충남 천안시는 현재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시에서도 가칭 「대전복지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복지재단이 설립된다면, 대전시와 민간사회복지시설의 매개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며, 아울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및 교부액 실질심사, 수탁자 선정 관련 기준 마련 및 심의지원, 회계절차 개선 및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으며,

둘째, 복지서비스의 수준향상 및 선진화 기능을 위하여 복지시설 간 연계와 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 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및 종사자 교육,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다양화되는 시민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복지정책의 전달체계의 효율화, 전문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보건·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전문화를 통한 보건·복지 서비스 확충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에 따라 가칭 「대전복지재단」 설립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국비 확보를 위한 대전시의 대책입니다.

매년 반복되고 되풀이 되고 있는 일이지만 시장을 선두로 시의 전 공직자가 중앙정부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전쟁” 이라고 불릴 정도로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앙부처의 폭넓은 인맥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 재정 인사와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국비 확보의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국비예산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국가예산의 배분이 중앙정부보다 지자체로 이양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가예산의 여유가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장께서는 취임 후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셨으며,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의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국비 확보에 대한 대전시의 업무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전시는 현재 국비 확보를 위해 구성된 8개팀 36명의 특별대책반을 소수 정예화하여 연중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을 신설·운영하고,

중앙부처에 인맥이 많이 형성되도록 중앙부처와의 교환 근무 활성화나 일정수당 지급 또는 인센티브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재정 살리기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06년도 예산규모는 9,375억원이나 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수입이 전체예산의 88%를 차지하는 등 교육재정 수입원의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99년부터 발행한 지방채 총액이 2,590억원을 넘기고 있는

실정인 동시에 금후 상환계획 금액이 1,100억원 이상으로 지방채가 교육재정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자만도 약 1,600만원에 달하고 설상가상으로 부족한 교육재정보전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방채를 상환하는 악순환을 거듭하는 등 교육재정의 건전운용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교육재정 수요가 날로 증가하여 열악한 교육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재정의 자체수입 증대를 위해 그동안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난 11월 24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의결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운용계획과 지방채의 상환 및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대책은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께 대전광역시의 교육재정 지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대전시의 교육원로 및 교육관련 전문가에 의하면 대전시가 타 시·도에 비하여 교육재정 지원이 인색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대전시의 비법정지원금은 2002년 1억 7,900만원, 2003년 27억 3,100만원, 2004년 24억 100만원, 2005년 46억 2,500만원, 2006년 15억 8,300만원으로 제4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경비와 열린교정푸른숲 가꾸기 지원금을 제외하면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교육재정지원 조례」의 제정 등 교육행정과 관련한 사항을 공약하신 적이 있으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하여 금년 10월 19일에 2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교육정책협의회를 적극 운영하는 등 전임 시장임기 중 2002년부터 교육정책협의회의 운영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 교육은 지원이 아니고 투자입니다. 지금은 교육을 단순히 지원만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차기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위해서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교육재정에 과감히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재정에 대한 시장님의 공약사항 이행과 교육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를 위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와 교육청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육정책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현재 양 기관의 업무 관련 실·국장으로 되어있는 위원회를 시의원과 시민단체,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으로 확대하여,

가칭 「교육정책협의회의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소년단체 활성화 모색입니다.

현대사회는 저출산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핵가족 확대에 의하여 1가구 1자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혼자 생활하는 청소년이 많아지면서, 친구들과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청소년 우울증,

자살 등 청소년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문제를 일으키는 연령이 낮아지고 폭력을 동반한 반항, 품행 장애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증가되는데 반해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대전시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이 여가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 TV시청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기는 하지만, 여가활동을 위하여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지 않기에 다른 또래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 역시 부족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은 학교내에서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RCY 등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단체는 현직 교사가 교육을 받은 후에 담당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소년단체를 운영하는 담당 교사에 대한 처우가 부족하기에 단체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담당하는 다른 업무가 많기에 청소년

단체를 활성화 하려고 하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단체활동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 시도에서는 교사의 근무여건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하여, 청소년 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교사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승진 우대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경기도, 충청북도,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충청남도과 서울시에서도 청소년 단체지도 부문에 선택가산점 일부를 도입하려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청소년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